

“李 재 판 연기하라”… 민주, 사법부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15일로 잡힌 첫 공판 기일을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탄핵·청문회·특검·입법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윤호중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거듭 요청한다”며 “5월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10대 대선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적법 절차의 원칙, 정치적 중립원칙을 모두 버리고 민주당가 주인의 참정권을 두렵게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정신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대선 불개입 의사 밝히고 선거운동 보장해야”
박범계 “조희대 대선 개입 표적 재판 기획자… 탄핵 사유”
이석연 “대법원 6월 3일 전 선고 강행은 위헌… 범죄행위”
오늘 국회 법사위서 사법부 견제 관련 법안 의결키로

조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조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표적 재판의 기획자’라고 규정하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후보자의 참정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역시 보장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해 있는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 관련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대법원이 6월 3일 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이라며 “탄핵 여부를 떠나 이런 대법원의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인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긴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의식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파기환송심 재판기일이 선거운동 기간에 잡힌 것에 대해서도 “헌법 제116조 2항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후보라 하더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며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협조를 해야 한다. 고등법원은 기일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고 헌법의 기본원칙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각종 입법과 청문회·국정조사·특검을 추진하며 ‘대법원 힘 빼기’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를 차단하거나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관

련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법관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함께 법원 관철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 ‘4심제’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만 본회의 처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감안해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와 특검 등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사법부대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5월 7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다. /뉴스시스

혁신당 도당, ‘민주현정 수호 전북 원탁회의’ 구성 제안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이 최근 ‘내란종식! 민주현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 원탁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박상수 정책실장은 제안문을 통해 “정치·시민사회·노동계·종교계 등 모든 지역 구성원이 함께하는 공론장이 필요하다”며 연대를 촉구했다.

박 실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민주주의 뿌리를 뒤흔든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대통령직 파면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극우세력의 복귀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일부에서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고, 허위정보 유포와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기고 돌아왔다”는 발언과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역시 정치적 복귀 시도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결성한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지역 확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북이 역사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과 경남 등에서는 이미 지역 원탁회의가 출범한 상태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특검 및 반한법행위 조사위 설치,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과 지방분권 실현, △시민사회와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전북 비전 수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실장은 “이 제안은 특정 정당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 이후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폭넓은 연대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정권교체, 전북이 앞장선다” 민주 도당, 대선 선대위 출범… 이재명 당선 결의 지역 민심과 소통, 현장 중심 정책 등 통해 전면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2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짜 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정권교체와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찬대 총괄상임 선대위원장, 김민석·한준호 공동 선대위원장, 이원택 전북도당위원장,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당원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전북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전북 확대를 심판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전북 지역 93% 득표율을 목표로 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제 함께 새로운 봄을 맞이하자”며 “전북이 민생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탄압은 정치적 공작”이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내란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대선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바로 세우는 역사적 기회”라며 전북의 결집을 요청했다.

출발식에서는 탄핵 인용 활동에 기여한 당원인 김주연·이정복씨에게 특별포상이 수여됐으며, 도당 청년위원회가 국민의례를 주관하고, 이덕희 작가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주제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이며 “대선 개입 중단하라”, “진짜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자”, “정권 교체 만수무침”은 구호를 함께 외쳤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지역 민심과 적극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과 공약 등을 통해 대선 승리를 위한 전면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거소·선상투표 대상자는 10일까지 신고”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거소투표),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선상투표) 등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6일부터 10일까지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자택·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거소투표) 및 팩스(선상투표)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임명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거주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8일부터 모든 정당·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2일부터 전단형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호 기자



장수에서 ‘경청 투어’ 나선 이재명 후보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장수군 천천면 오옥마을에서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문수 “국힘, 전국위·소집 이유 밝혀야”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 보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배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가 6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되며 배경 설명을 공개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이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지했다”며 “당은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사실, 의구심을 깊게 하는 당의 조치들 때문에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간 단일화를 고려한 행정절차라고 맞섰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배경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가 6일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절차로 판단되며 배경 설명을 공개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이 의제와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전국위와 전당대회 소집을 공지했다”며 “당은 전국위원회, 전당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는 “당에서 단일화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사실, 의구심을 깊게 하는 당의 조치들 때문에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간 단일화를 고려한 행정절차라고 맞섰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적극적인 지지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도 후보를 배제한 채 일방적 당 운영을 강행하는 등 사실상 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선 직행을 확정지었다. 경쟁자로 주목받던 한동훈 전 법무 장관은 43.47%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이현승 전국위원장 겸의 제6차 전당대회 소집공고와 제15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를 냈다. 전당대회는 오는 10~11일, 전국위는 오는 8~11일 중이며 시간과 안건은 추후 공고하겠다고 했다. 전당대회는 장소도 추후 공고 예정이며 전국위는 비대면 회의(당 유튜브 채널 중계) 및 ARS 투표로 진행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나설 것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6일 현재 김문수 후보는 대선 관련 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 마무리

도 15억·교육청 77억 삭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총 3차 회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811억원(수정예산 61억 증액 포함)과 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조7,238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로는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10조811억원 중, ‘전북연구원 운영 및 지원(△8,500만원 삭감)’ 등 총 9건, 1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도교육청

은 총 4조7,238억원 중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원 전액 삭감)’ 등 총 11건, 77억원을 삭감하고 각각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심사 의결 내용으로는 ‘전북자치도 관광브랜드 개발 용역’은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모인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과 ‘전북특별자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지원’ 사업은 사무실 내부공사를 반드시 입찰 공고를 통해 추진하고,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25 전주 드론축구월드컵 운영 지원’ 및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운영 지원’ 사업은 전반적인 추진 과정에서 도내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50억200만원 전액 삭감)’ 사업은 교직원 업무경감 및 안전한 학교 환경을 위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학생 및 교사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우려와 함께,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개발 중인 교수학습 플랫폼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지역특화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정의당이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고, 권영국 당대표를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오현숙)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은 지난 5일 당명 변경을 위한 당원 총투표를 거쳐 새 당명을 ‘민주노동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당명 변경은 진보 정치세력 간 연대를 목표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오현숙 위원장은 “여러 진보정당과 노동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새롭고 통합적인 이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에는 민주노동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화학생유노조, 노동당, 노동전선, 전국결집, 탄핵너머연구자네트워크, 노동자가여는평등의길,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진보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녹색당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당명 변경은 5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당원 총투표를 통해 이뤄졌다.

투표율은 35.72%였으며, 이 중 71.37%가 찬성해 ‘민주노동당’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4월 13일 열린 당대회에서는 ‘평등사회당’, ‘사회연대당’, ‘가자! 평등으로’ 등이 후보로 올랐으나, 최종 투표에선 ‘민주노동당’ 단일안이 상정됐다.

당명 변경과 함께 대선 후보 선출도 진행했다.

권영국 당대표는 같은 투표에서 93.59%의 찬성률로 21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다.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도 지난 4월 30일 권 대표를 공동 대선 후보로 선출한 바 있다.

권 대표는 이에 앞서 4월 29일 당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에는 통합과 단결, 기쁨과 성취의 기억이 담겨 있다”며, “2000년 창당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출발을 하자”고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